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은 1일 본선 경선레이스에서 정책 비전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사진은 이날 민주 대선주자들의 정책발표와 토론회,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박준영 후보. /연합뉴스

文 흔들리자 … 孫·金 1위까지 넘봐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민주당 대선 '2강' 경쟁 치열

후보 단일화·합종연횡 변수

민주통합당의 대선경선 후보 본경선전이 본격화하면서 결선투표에 올라갈 최종 '2강(强)'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초반부터 후보 간 합종연횡이 거론되면서 본경선 마지막 날까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흔들리는 문(文), 기회 잡은 손(孫)·김(金)**=문재인 후보가 지난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문재인 대세론'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이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문 후보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참여정부 실패론' 때문에 타격을 받았고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에서도 박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틈을 타고 각종 여론조사(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2위를 달리는 손학규 후보가 호시탐탐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SNS상 관심도를 알 수 있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수에서도 1주일여 전부터는 문재인 후보를 제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손학규-안철수' 조합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향이 큰 때문으로 정치권은 풀이하고 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최근 발간한 '안철수의 힘'이란 책에서 "안철수와 손학규가 멋지게 경쟁하고 누가 후보 자리를 차지하든 성숙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한 후의 현상이다. 특히 당내 최대 계파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지지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두관 후보도 친화력과 활발한 조직력을 중심으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지사직을 그만두고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상당수 조직을 흡수, 지지율이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잠시 반등하던 지지율은 정체 상태로 빠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갑자기 수많은 지지자가 몰리면서 이를 조직화하지 못하는 등 대선캠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때문에 캠프가 원활하게 가동하는 8월에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대세론'은 여전하다며, 최근의 지지율 하락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담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예비경선에서의 경험이 '예방주사' 역할을 해 본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들 합종연횡 이뤄질까**=우선, 정세균 후보 측에서 호남후보 단일화를 꺼내들었다. 정 후보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컷오프에서 통과한 5명 중 두 사람이 호남후보인데, 이들의 지지율이 비교적 낮다. 그렇기에 호남후보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어떠냐는 흐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준영 후보는 이를 일축하고 본경선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가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사와 후보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대한 부담이 커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경우 중간에 다른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단, 박 후보는 '참여정부 출신 인사(문재인, 김두관, 정세균)와 야권연대 주도 인사(손학규)로는 정권창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그 누구도 단일화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본경선 과정에서 박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구애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준영 "끝까지 완주하겠다"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 일축

민주통합당 박준영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선에 나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 후보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도 논의되는 바 없다"며 "(특정후보와) 연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경선을 완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컷오프 경선 이후 다른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이 자주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그러한 정치공학적 접근은 후진적"이라며 "세력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많은 국민이 정권을 바꾸는 게 좋다면서도 민주당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만큼 경선에서 신뢰를 찾고 수권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정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참여정부에 관여한 인사들은 나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 정세균 후보는 이날 박 지사와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 "저나 박 지사나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단일화하면 본경선도 훨씬 유효하게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능하면 단일화를 해서 중부권 후보, 영남권 후보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 등 세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해 아름다운 경선, 역동적 경선을 만들어내면 민주당의 본선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경쟁도 훨씬 유효하게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의혹 자체가 황당…충분히 해명"

박지원 민주 원내대표 … 검찰, 재소환·불구속 기소 고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검찰 출두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다"며 "그간 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틀 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모습, 또 제가 검찰에 나갔을 때 10여명의 의원이 같이 가서 하루종일 검찰청사에서 대기한 모습 등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12월 정권교체는 이런 치열한 단결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에 자진출석한 뒤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07년 서울 여의도 음식점과 2008년 목포의 한 호텔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59·구속)로부터 저축은행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활짝 웃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팀은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돈의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재소환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조사내용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재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전날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한 번 더 부를 수도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원내대표와 변호인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를 법원에 신청했다. 체포동의안이 철회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시엔 다시 한번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돼 통과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통합진보당원 3600명 탈당·당비 납부 중단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 이후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거나 당비납부를 중단한 당원이 3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이·김 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27~31일 전체 탈당자 숫자는 2268명이고 당비납부 중단자는 1321명으로 집계됐다.

탈당자의 경우 국민참여당 출신이 794명(35.0%), 민주노동당 출신이 489명(21.5%), 통합진보당 출범 이후 당에 가입한 일반당원이 985명(43.4%)이다. 또 당비납부 중단자는 참여당 출신이 809명(61.2%), 일반당원이 387명(29.3%), 민노당 출신이 125명(9.4%)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